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40호 | 2024년 11월 25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및 AI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류이현 연구위원 ·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요약 》

■ 딥페이크 성범죄 및 제도개선 현황

- 일상과 공적영역을 넘나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폭증, 특히 한국이 압도적 증가 기록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개정(2024.9.)을 통해 처벌강화 및 수사범위 확장, 피해자 지원 체계 근거 마련 등 부분적 성과

■ 추가적 법 개정 및 신설 제안

-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물 삭제·접속차단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을 경찰에 부여
-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성범죄 처벌 내용을 「성폭력방지법」에 통합·체계화하고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 및 범위 확대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수사관의 면책 가능성을 적시하는 등 수사의 적극성 보장
- 「AI에의한권리침해방지법(가)」과 「사이버범죄피해자권리구제법(가)」 신설을 통해 AI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법) 지체 현상 축소

■ 제도개선 및 AI 규제 방향 제안

-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진위여부보다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법적판단 기준으로 설정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역효과 방지
- AI 오남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방지
 - 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이용 또는 조롱을 목적으로 한 생성물에 대한 규제
- 이미 형성된 온라인상의 거대한 성착취 생태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모색해야
 -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을 포괄하며 지속적 수사 보장 & 다부처의 공조, 거버넌스 운영

[참고] AI오남용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 침해 방지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유의사항

- 화이트리스트 규제 방식 등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보호 영역의 확장 및 강화
-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명분이 창작권 및 웹콘텐츠 산업 발달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 키워드: 딥페이크 성범죄, AI 성착취물, AI규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언택트 시대의 살인,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언택트 시대의 살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전략(2024.8.30.)’ 참고

- ▷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 딥러닝은 컴퓨터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치 사람이 학습하듯 스스로 데이터 속 규칙을 찾아내어 예측이나 분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기술
- ▷ **딥페이크 성범죄**는 AI기술을 활용해 기존 음란물에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합성하여 성착취물 또는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형태. 일반인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음

○ 일상과 공적영역을 넘나드는 딥페이크 성범죄 폭증

- AI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져 군대, 학교, 가족 등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
 - 성범죄 피해자의 87%가 10~20대, 검거된 피의자 약 70% 역시 10대인 특징
 -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간 23배 증가(전체 성폭력의 25%),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23년 8983명으로 급증
-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압도적 증가 기록
- 공공 신뢰를 손쉽게 무너뜨리는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 경향

○ 딥페이크 포함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법제도 공백

- AI 활용 범죄에 적용할 근거법의 부재로 범죄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 불명확
-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양형 기준 및 전담인력 부족
- 범죄 전담인력 부족 및 사후약방문식 안이한 대처
 -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통해 사건을 수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발생하기도

2.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주당의 역할

○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 추진

- 범죄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신속한 법안 개정을 위해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 대책 특별위원회(2024.9., 의장 추미애)’를 구성
 - ‘제도개선팀’과 ‘현장목소리팀’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아내고자 함
 -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인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선제적 조치 및 중장기적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

<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결과(2024.9.23.) >

-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신분 위장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조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 경찰의 응급조치 조항을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조항을 신설해 증거보전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이룬다 ... 등

○ 노력의 결과,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통과(2024.9.26.)

-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 및 비공개 수사범위 확대, 체계적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자를 처벌할 때 '반포할 목적'을 입증하지 못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됨
 -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협박은 3년 이하, 강요는 5년 이하로 상향(기존 법에서는 협박은 1년 이하, 강요는 3년 이하의 징역)
 - 비공개 수사 항목을 신설, 긴급을 요할 때는 경찰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현재 서울·경기·인천·부산에만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위탁 등 운영 근거 명시

3. 추가적 법 개정 및 신설 제안

○ 「성폭력처벌법」 개정

-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피해물 삭제·접속차단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이 경찰에 있어야 함
 -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의 부재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지속되어 왔음(ex. 2021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 지적)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 성범죄 피해물을 발견하면 직접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응급조치' 신설을 발의(박은정 의원 발의)
 - ※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을 삭제하려면 방심위를 통해야 함
 - 그러나 9월 본회의에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과 방통위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여가위가 수용하여 '응급조치' 신설 무산, '방심위에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그침

⇒ 경찰의 응급조치 발동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원 단체 및 기관, 연대자 등의 고발에 의해서도 발동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가 주로 '복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에 사진, 글, 인쇄본에 대한 생성 및 소지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 현행법에 의하면 성착취물을 '플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경우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이 「성폭력처벌법」에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디지털, 활자, 사진, 조형물, 그림 등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생성물과 창작물을 포함해야 함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 허위영상물의 정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에 ‘AI 절차적 생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표현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에 대한 면책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①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조건 삭제
 - 단, 긴급을 요구한다는 판단에 대한 면책 가능성 -수사 결과 긴급이 아니었거나 무고였다거나 하더라도 이를 결정한 수사관을 벌하지 않음을 명시- 등 추가적 조치로 보완
 - ※ 「적극행정운영규정」 참고: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덧붙여, 표현물의 제작, 생성에 이용된 실존인물의 범죄 발생 당시의 연령을 처벌의 기준으로 해야
- ⇒ 전체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아동이 관계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정도로 단순화하고, 성범죄 및 처벌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함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제하고자 했던 ‘불법촬영물’에 대한 규제 및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및 면책에 대한 근거조항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옮겨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AI에의한권리침해방지법(가)」과 「사이버범죄피해자권리구제법(가)」의 신설로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AI기술에 의한 범죄 및 피해 발생을 대비해야 함

○ 「AI에의한권리침해방지법(가)」 신설

-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학습한 결과물인지 모두 첨부하고(태깅: tagging)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 생성물의 제자가 자신의 무결함을 증명하도록 해야 함
 - 만약 AI생성물에 태깅이 없는 경우에도, 전문가가 특정 이미지나 사진, 영상 등이 학습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 ※ 태깅(tagging): AI 학습 데이터에 관련 정보를 첨부하는 과정
 - 현재 AI생성물은 회사가 학습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생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와 학습 알고리즘을 토대로 생성자가 직접 ‘학습’시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독립 프로그램’ 형태가 따로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가해 및 책임의 주체를 분리해야 함
 - AI 생성형 서비스의 회사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서비스한다면 규제할 수 있어야 함(ex. EU의 디지털서비스법)

- AI 생성의 결과는 학습 기반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므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절차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
- 위원회 등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리면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는 학습 절차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며, 불응 시에는 법원이 ‘알고리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도 불응할 시 반론권을 상실한다는 형태로 설계 필요

○ 「사이버범죄피해자권리구제법(가)」 신설

- ‘잊혀질 권리’=‘완전한 삭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 현재는 피해자가 모든 법적 대응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로, 수사기관의 의지와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에 여성단체 및 자발적 ‘활동가’들의 수사 보조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곤 하였음 (ex.서울대 딥페이크 능욕 사건)
-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임에도 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현장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는 한계가 뚜렷함 → 시간 제약 없는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해야 하며,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전담 수사기관(인터넷 경찰서 등)이 설치되어야 함
- 현행 수사 인력의 전문성으로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상담, 수사, 법률 보조 등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함

4. 제도 개선 및 AI규제 방향 제언

○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진위여부 보다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쟁점으로 삼아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는 보다 철저히 규제되어야 함

-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과는 달리,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여전히 ‘허위’정보 확산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이에 상응하여 충분하지 못함
- 해외에서도 다양한 규제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 유포 등 각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동의 여부’ 판단이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됨
- 영국의 2023년 개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without consent)’ 악의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욕감, 경고 또는 고통을 주고자 했다면 위법으로서 형사입건됨(상한선 없는 벌금 및 징역형 가능)
- 프랑스는 2016년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공간규제법(SREN)’에서 ‘비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non-consensual deep fakes)’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은 2024년 7월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를 알고도 수신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디파이언스법(Defiance Act, Disrupt Explicit Forged Images and Non-Consensual Edits Act)」이 상원을 통과함

- 좀 더 신속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정부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관련 법률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23개 주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률 통과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함
 - 실제로 ‘갯갯’, ‘N번방’, ‘박사방’ 등 가해자 및 가해 플랫폼의 명칭을 그대로 보도한 이후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이 성착취 플랫폼을 검색, 피해물을 접하는 역효과 발생
 - 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의 특성 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관점과 젠더감수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지침이 없음

○ AI 오남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방지

- 실존인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 사례가 더욱 다각화되어 현행법을 통해서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예인의 사진과 포르노를 합성하여 특정 인물로 인지될 수 있는/ 연예인 ‘다수’의 사진과 포르노를 합성하여 ‘특정 개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한국 아이돌 야동’과 같은 형태의 성착취물 생산, 유포, 판매하는 경우
 -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생성물을 생산, 유포 판매하는 경우(ex.: 한국 연예인 룩북(lookbook)을 빙자한 랜제리 및 수영복 등의 AI생성물의 판매, 직접적인 성적 노출은 없으나 성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AI 생성물의 판매 등)

※ 룩북(lookbook)의 원래 의미는 패션사진들의 모음집 또는 모델, 사진작가 등의 예시 작업물

⇒ **방지 대책:** 현행법의 개정을 통한 권리침해 방지는 한계가 있기에 「AI에의한권리침해방지법(가)」 및 「사이버범죄피해자권리구제법(가)」 신설 필요

- ‘내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이용을 성범죄 및 인격권 침해 범죄로 이원화하는 처벌방식 도입
- 목소리와 외모 특징 등도 인격권 또는 저작인격권으로 분류하는 형태의 법안 도입

< AI 오남용으로 인한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

- ▷ 정치인 및 유명인의 딥페이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거리로 삼는 경우
ex. ‘기초의원 30명 딥페이크 협박 받았다...경찰 수사 착수 (한겨레 보도 2024.11.18.)
- ▷ 가수 및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AI 노래를 만들거나 대사 녹음을 작업하는 경우
ex. ‘일본 성우들 AI와의 전쟁...'목소리를 지켜라" (YTN 보도 2024.11.18.)

○ 온라인 성착취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

- 이미 형성된 온라인상의 거대한 성착취 생태계를 뿌리 뽑기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 온라인상의 거대한 성착취 생태계(성착취물 제작자→유포·소지자→시청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 범죄의 의뢰자는 행위자, 정범, 방조범, 또는 교사범 중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특정 행위가 추가되는 방식의 입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공략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을 포괄하며 지속적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 현재의 미흡한 협력체계(단속과 수사, 현황 파악 등)를 보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위한 여러 부처의 공조,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수사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 통합관리 방안 모색해야



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ii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2024). 딥페이크 관련 해외 입법동향(2024.3).

[참고-1] AI 오남용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 침해 방지

○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 침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AI기술을 활용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 침해 발생

- 특정 작가의 화풍 또는 대표 이미지를 학습시켜 유사한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 ※ 특히, 특정 브랜드나 작품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가 급증
- ‘제2의 창작’이라 불리는 번역에 대해서도 원문-번역문을 학습시킨 AI 번역기가 발달, 번역시장에서 기계번역을 1차 번역으로 간주하여 번역 단가를 깎는 등 문제가 속출
- 향후 3D 모델링, 음율 등의 영역으로 권리침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

⇒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저작권 보호 영역의 확장 및 강화

- 저작물의 이용 규제에서, 블랙리스트 방식(특정 항목을 차단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허용)이 아닌 화이트리스트 방식(특정 항목만 허용하고 그 외의 것은 차단)으로 규제할 수 있음
-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므로, 비상업적 이용(기술 발전을 위한 이용 등) 등에는 면책을 주는 등, 관련 업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블랙리스트인 경우에도 문체부장관령으로 규제 범주를 다루도록 명시하여, 신규 기술이 도입되고 시장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창작자들의 권리가 빠르게 지켜지는 방향을 검토
- 저작권에 대한 전매를 위법으로 개정하고 SNS 등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회사가 창작자가 게재한 저작물에 대한 AI 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비밀리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함
 - ※ 회사가 사용자의 저작물을 AI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X(구 트위터) 등에서 이미 발생하여 이용자의 이탈 및 (미국과 EU 내 법정)고소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규범의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함

[참고-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유의 사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저작권 및 웹 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저작물에 대한 탄압으로도 연결될 때 저작권 및 웹 콘텐츠 산업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 로맨스판타지 등에 등장하는 현실세계에서는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성 관련 요소들이 「청소년성보호법」 판례를 통해 ‘성착취물’로 정의됨으로써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 웹툰 및 웹소설 산업의 위축을 초래
- 법원이 미풍양속을 빌미로 만화 등 저작물의 성적 묘사(실존인물의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를 성착취물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음란한 이미지’의 검열 기준이 ‘성인의 신체’라는 인위적 정상성에 집중하여 ‘디포르메(변형)’된 인체를 활용한 성인물을 검열하게 됨
 - ※ ‘디포르메(변형)’: 미술, 특히 주로 회화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일부 변형, 과장, 축소, 왜곡을 가해서 표현하는 기법
- 게임과 만화 간행물 심의에서는 ‘디포르메(변형)’된 인체에 대해서는 성적인 묘사가 있어도 ‘비현실성’이 더욱 강하게 인지된다고 심의 등급을 한 단계 낮게 책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서는 ‘어린 외형’의 특질을 반영한 ‘디포르메’된 인체에 대해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음

⇒ 순수 저작물이 아닌 실존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